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11월 | 허위정보 확산, 거버넌스 리스크

2026 November I vol.167

Brief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자율 운영정책 및 투명성 확보 기준 제시
2	기업의 허위정보 확산 예방을 위해 대외 게시물의 사실·출처 확인, 검수·승인 및 오류 정정 절차 마련 등 운영 강화 필요
3	(사례) 버거킹, AI 면접 관련 허위영상 확산에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해명 대응, 모회사 RBI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승인 원칙을 통해 책임 있는 소통체계 강조
4	권익위, 공익신고자 형사책임 감면제도 개선과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강화 등 신고자 권익 보호체계 확대 추진
5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기업의 자진신고·수사협조 지침 개정, 사전 협의 절차 및 기소유예합의(DPA) 협상의 예측 가능성 강화
6	국내 ESG 평가에서 담합 제재 기업의 준법시스템 도입률이 비제재 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내부통제와 준법관리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제기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11월 1일(매월발행, 통권 167호, 비매품)
발행인: 정일연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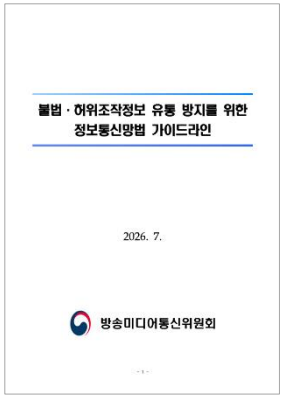
일반민원상담 ☎110
부패공익신고 ☎1398

목차

1	윤리 체크리스트	불법·허위조작정보, 기업이 알아야 할 예방과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2026. 7. 8)	
2	사례 돋보기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대외 소통 버거킹(Burger King)	
3	윤리, 지금	권익위 동향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총회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 공유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 발간
			공익신고자 형사책임 감면 요청 및 보호제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금감원, 신고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국내외 동향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기업 자진신고, 수사협조 지침 강화
			담합 제재 기업, 준법시스템 도입률 높아…실효성 논란
			한국 ESG 기준원, 개인정보 유출 기업 ESG 감점 강화
			미국 법원, 공급망 배출·기후위험 공시에 제동
4	윤리 네컷	AI 가 만든 숫자, 누가 책임질까?	
5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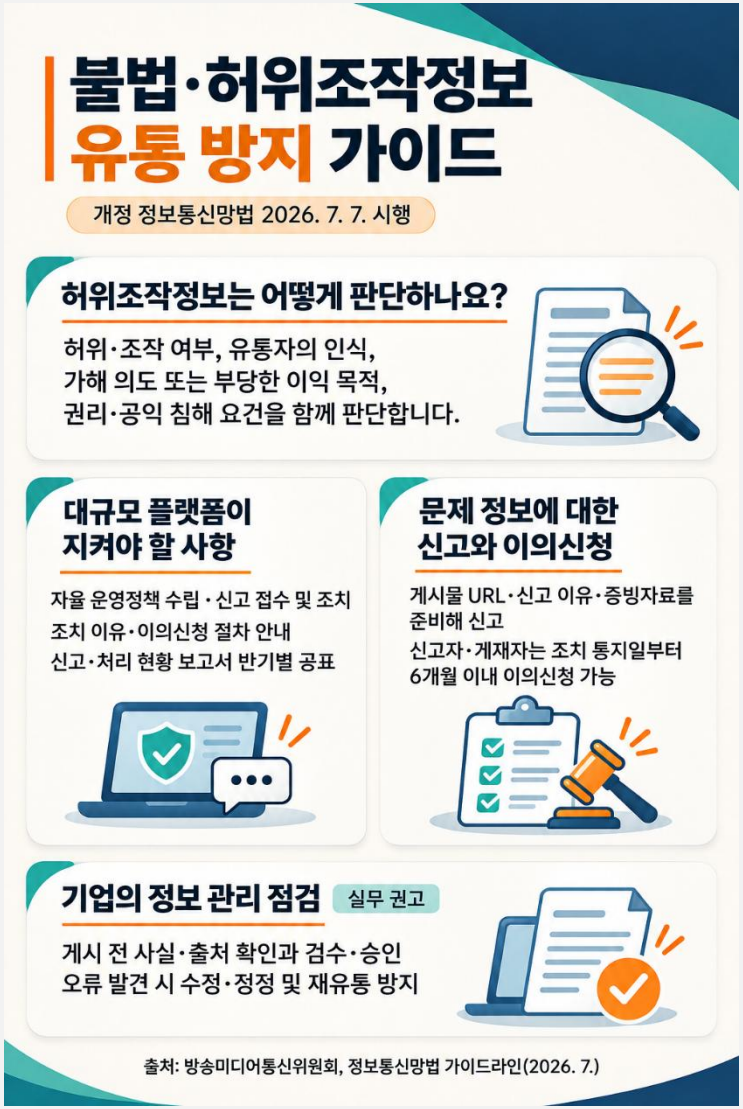
윤리 체크리스트

불법·허위조작정보, 기업이 알아야 할 예방과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2026. 7. 8)

- **허위조작정보 판단:** 허위·조작 여부뿐 아니라 유통자의 인식, 가해 의도·부당이익 목적, 권리·공익 침해를 함께 확인.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이의신청 처리, 조치 이유 통지 및 반기별 보고서 공표.
- **모든 기업의 실천:** 게시 전 사실·출처 확인, 오류 정정, 문제 정보의 증빙 확보와 신고·대응.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월 6일 공포·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해 7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개정법에서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의 유통 기준, 사업자 준수 사항, 피해구제 방법과 제재를 안내하며, 이용자 보호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한다. 불법정보에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불법 개인정보 거래 정보 등이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유통자의 인식, 가해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 타인의 권리나 공익 침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등 공개적인 이용자 간 정보 유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 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 만 명 이상인 사업자다. 이들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판정, 신고, 조치 기준 등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는 이해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자체 정책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고 삭제·접근 차단·노출 제한,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60 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양 측은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유형별 신고·처리 건수, 이의신청 결과, 자율 운영정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반기별로 공표해야 한다. 또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협약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결과의 서비스 반영 사실을 공개하고, 검증 대상 선정과 방법·결론 등에 관한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류를 책임 있게 바로잡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키는 청렴윤리경영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에 따른 의무와 게재자로서의 사실 확인·오류 정정, 신고자로서의 증빙자료 확보·신고·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기업의 적용 대상과 사안별 역할에 따라 법정 의무와 실무 권고를 구분해 구성하였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예방·대응 정책 체크리스트>

구분	정책·절차 점검 사항	적용	기준
자율 운영정책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판단과 신고·조치 기준을 마련했는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법령준수
신고 처리	신고 접수와 조치 이유 통지, 신고자·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는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법령준수
운영 투명성	신고·처리 현황과 이의신청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의 반기별 공표 절차를 마련했는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법령준수
사실확인 협력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공개와 검증의 독립성 보장 기준을 마련했는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약체결시 준수
정보 게시	게시·공유할 정보의 검토 기준에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법정 판단 요건을 반영했는가?	게재자	참고사항
표현 검토	본문과 명백히 다른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하는 행위를 검토 대상에 포함했는가?	게재자	참고사항
재유통 관리	확정판결이나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유통하는 경우의 책임을 정보 관리 기준에 반영했는가?	게재자	참고사항
신고 준비	문제 정보 신고 시 필요한 게시물 위치·신고 이유·증빙자료·신고자 정보를 대응 절차에 반영했는가?	신고자	참고사항
이의신청·분쟁조정	플랫폼 조치에 이견이 있을 때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과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에 반영했는가?	게재자·신고자	참고사항
공익적 표현 보호	공익적 정보의 가중배상 적용 제외·면책과 정당한 비판·감시를 방해하는 소송의 남용 방지 규정을 분쟁 대응 기준에 반영했는가?	손해배상 분쟁 당사자	참고사항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2026. 7. 8), 관련 법 규정]

참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2026. 7.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사례 돋보기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대외 소통

사례기업: 버거킹(Burger King)

핵심 키워드: #허위정보 대응 #투명한 공식 대응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허위정보 확산) 버거킹의 AI 기반 면접 시스템을 소재로 한 영상이 실제 채용 과정으로 오인되어 SNS 에서 확산되면서 기업의 채용 관행과 윤리성에 대한 논란 발생.
- (공식 대응 및 사실관계 해명) 버거킹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영상이 가짜임을 밝히고, 영상에 등장한 AI 면접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오해 해소에 대응.
- (윤리적 대외 소통체계) 모회사 RBI 는 기업윤리강령을 통해 공식 메시지의 일관된 관리, 대외 발표 사전 승인 및 SNS 소통 기준을 규정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 있는 소통을 강조.



버거킹(Burger King)

버거킹(Burger King)은 1954년 설립된 미국의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이자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RBI,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의 계열 브랜드다. 2026년 11월, 버거킹이 인공지능(AI) 면접관을 활용해 직원을 채용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해당 영상에는 '카렌(Karen)'이라는 AI 면접관이 지원자의 복장과 답변을 비판하고 시급 4달러를 제시하는 등 부적절한 면접을 진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SNS 이용자들이 이를 실제 버거킹의 채용 과정으로 소개하면서 AI 채용의 적절성과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코미디 영상으로, 실제로는 버거킹의 채용 과정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상이 재유포되는 과정에서 코미디 목적이라는 원래 제작 맥락이 생략된 채 실제 채용과정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기업이 직접 생산 및 배포한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제작한 AI 기반 콘텐츠가 실제와 다른 맥락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의 평판뿐 아니라 채용의 공정성, 윤리성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허위정보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영상의 진위와 실제 채용 방식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했다. 버거킹은 2026년 11월 10일 홈페이지 성명서를 게시하여 해당 영상이 가짜라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영상에 등장한 AI 기반 면접 시스템(AI bots)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는 가맹점도 파악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거킹의 모회사인 RBI는 '기업윤리 및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Ethics and Conduct)'을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ng with the outside world)**에 대한 부분도 규정한다. 해당 원칙에서는 특히 기업을 대표하는 공식 발표와 SNS 게시물 등에 대해 법무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해관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전달하도록 명시한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평판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상시적인 윤리경영 관리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청렴성과 투명성은 내부의 윤리적 행동뿐 아니라 외부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책임 있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기업은 허위정보에 대한 신속한 사실확인과 공식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의 진실성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버거킹의 AI채용 논란 영상과 공식 성명서>



[출처: 버거킹 홈페이지, https://ncijnetwork.com/does-video-show-real-ai-job-interview-for-burger-king/]

<RBI 기업윤리 및 행동강령-대외 커뮤니케이션 발췌>

구분	주요 내용
공식 소통체계	중앙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통해 기업 및 브랜드에 관한 공식 메시지를 일관되게 관리
대외 발표 사전 승인	기업을 대표하는 공식 발표는 법무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사전 승인 필요
SNS 소통 관리	기업을 대표하는 SNS 게시물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전 승인 원칙 적용
직원의 SNS 이용	개인 SNS 활동 시에도 기업 및 브랜드의 평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소통
정직하고 책임 있는 소통	SNS 이용 시 진실성·윤리성·책임성을 준수하고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유의

[출처: RBI, Code of Business Ethics and Conduct]

참고

Burger King Newsroom, statements
RBI, Code of Business Ethics and Conduct
NCIJ NETWORK, Does video show real AI job interview for Burger King?(2026.11.13)

권익위 동향

권익위 활동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총회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15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정책 동향과 지능형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반부패 기관의 효과성 제고, IACA의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신고자 보호체계 확충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4대 중점 분야의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IACA 및 각국과 반부패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반부패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 년 11 월 2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20810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무자들이 국내외 반부패 동향과 실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공개했다. 이번 모음집은 2026년 발간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의 주요 내용을 선별·정리한 것으로,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 다양한 윤리경영 현안을 다뤘다. 특히 주제별 실무 체크리스트와 관련 보고서 분석, 국내외 기업의 윤리경영 우수·위반사례를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주요 윤리경영 메시지와 사례를 네컷만화로 구성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음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내 '청렴윤리경영' 게시판에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체 윤리경영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 년 11 월 2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20811

권익위 정책

공익신고자 형사책임 감면 요청 및 보호제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2명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형사책임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신고자들은 2024년 회사의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신고한 이후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고소가 취하됐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계속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수사기관과 공소청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사 단계에서도 책임감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 년 10 월 29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20635

국민권익위-금감원, 신고자 보호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 관련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생계 곤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를 줄이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신고 시 불이익조치 관련 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으며,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시스템인 청렴포털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 년 11 월 17 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21453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기업 자진신고, 수사협조 지침 강화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은 10 월 13 일 기업의 사기·뇌물·부패 혐의에 대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수사협조 지침(Corporate Cooperation Guidance)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기업은 공식 자진신고에 앞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SFO 법률서비스 책임자와 직접 사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위법행위 조사에 비례적·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소유예합의(DPA) 협상 완료 목표기간인 6 개월의 기산점을 기업이 협상 초청을 수락한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SFO 는 신속한 자진신고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합의 협상 기회를 제공하며, 신고 후 48 업무시간 이내 연락하고 6 개월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 영국정부 홈페이지 2026 년 10 월 13 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sfo-strengthens-corporate-cooperation-guidance

담합 제재 기업, 준법시스템 도입률 높아…실효성 논란

ESG 평가사 서스틴베스트가 국내 1,328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이 58.2%로,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28.9%)의 약 2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6 년 평가자료 분석 결과, 94 개 기업이 총 125 건의 담합 제재를 받았으며, 건설·음식료·통신서비스 등 12 개 업종에서 담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제재 기업의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은 35.4%로, 비제재 기업(12.3%)보다 약 2.9 배 높았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러한 결과가 준법시스템의 도입과 실제 준법경영 실천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며,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내부통제와 준법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026 년 11 월 19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80104

ESG

한국 ESG 기준원, 개인정보 유출 기업 ESG 감점 강화

한국 ESG 기준원(KCGS)은 올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액 과징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ESG 평가 감점을 강화하도록 심화평가 모형을 개편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평가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피해 규모와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ESG 등급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주로 사회(S) 부문에서 평가하며, 피해 사실 통지와 2 차 피해 방지 및 구제 조치 등을 살펴본다. 특히 보안 위험에 대한 보고·감독 등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될 경우 지배구조(G)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계열사의 보안 사고가 금융지주의 통합 ESG 등급에도 반영될 수 있다.

- 이투데이 2026 년 11 월 9 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5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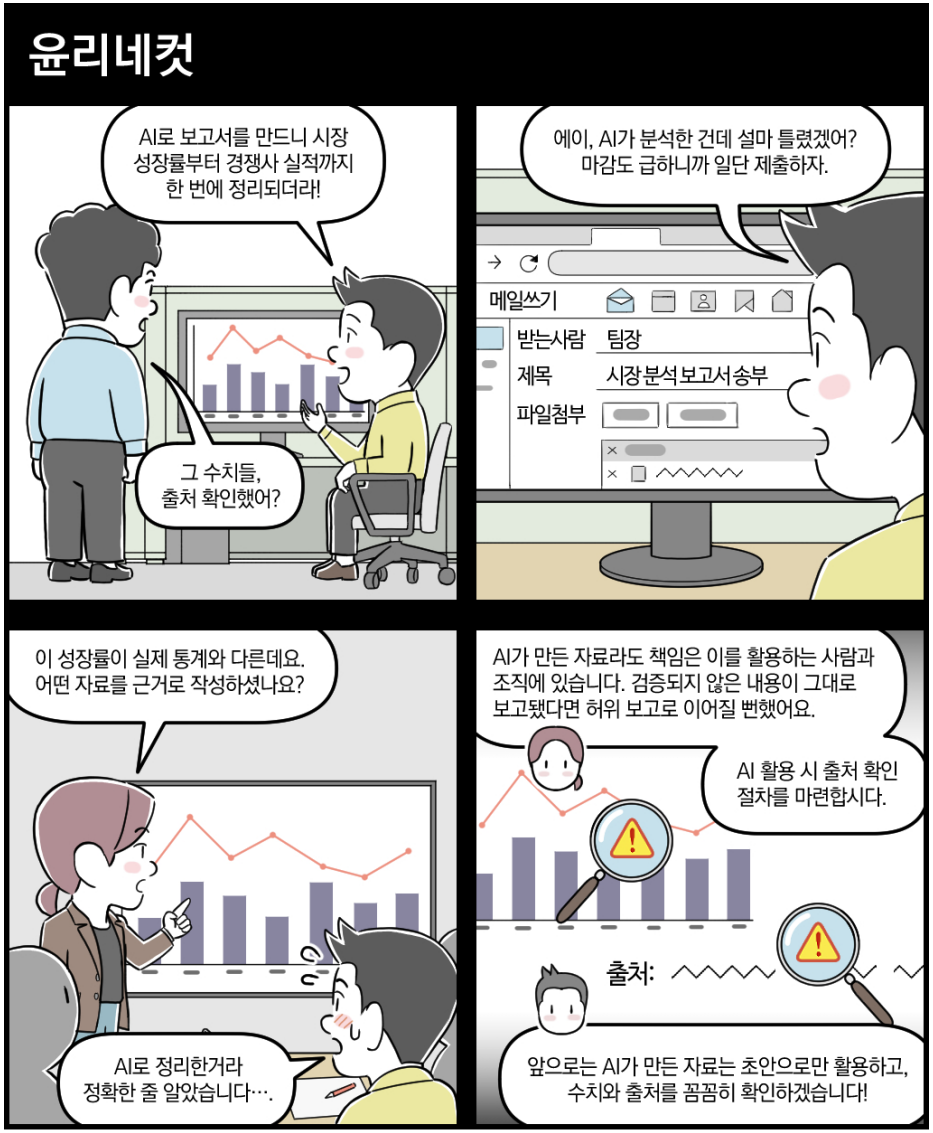
미국 법원, 공급망 배출·기후위험 공시에 제동

미국 연방 제 9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기후공시 규제와 관련해 온실가스 직접배출(스코프 1)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 2) 공시 의무는 유지하되, 공급망 배출량(스코프 3)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 SB253 은 연 매출 10 억 달러 초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SB261 은 연 매출 5 억 달러 초과 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원은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공급망 배출량이나 미래 위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한경 BUSINESS 2026 년 11 월 16 일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11168482b

윤리 네컷

AI가 만든 숫자, 누가 책임질까?



행 사

2027 ESG 트렌드 세미나

AI 전환과 ESG 공시 의무화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전망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기업·공공기관의 ESG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

- 주최: 한국ESG경영개발원
- 일정: 2026년 12월 2일(수)
- 장소: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
- 참고: https://kemi.re.kr/academy/?idx=85#prod_detail_detail

FCPA and Global Anti-Corruption

미국 법무부 등 각국 규제·수사기관 관계자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반부패 규제 동향과 기업의 부패 위험관리 및 준법경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

- 주최: American Conference Institute(ACI)
- 일정: 2026년 12월 10일(목)~ 12월 11일(금)
- 장소: 미국 워싱턴 D.C., Gaylord National Resort & Convention Center(대면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 참고: https://www.americanconference.com/fcpa-dc/

독자 퀴즈

※퀴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독자의견은 이메일/퀴즈 응모 폼의 의견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 기업이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은?

①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인기 있는 정보는 그대로 공유한다.
③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 공개한다.
④ AI가 만든 정보는 검증 없이 활용한다.

응모하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12월 14일(월)까지
(1)'응모하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호 정답	기프티콘 당첨자 안내
③	이○진님, 최○요님, 신○철님, 황○엽님, 정○림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

★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윤리경영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